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강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번영 추구”

□ 비전과 목표

- 현재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반 복지 인프라 수준을, 빠른 시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데 일차 목표를 둬.
- 현행 복지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5대 사회보험 제도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완전고용 상태를 전제로 기획된 것인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현실은 세계 최고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50%이상의 임금근로자들이 소득세 면제 대상인 상태임.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재정 적자의 확대와 실업확대를 피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포기한 데 따른 결과로, 결국 그 같은 선택으로 인해 초래된 불일치(mismatch) 상황을 수정해야 할 책임은 전체 사회와 국가에 있다는 판단이 다음에 제시하는 정책들에 전제 되어 있음.

□ 주요 정책

■ 단기적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 도입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충실화
- 공보육시설 확충
- 국민주치의제 실시
-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확대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현실화
- 좋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중기적 정책

- 아동수당제 실시
- 사회적 합의를 거친 기초연금제 중심의 개혁
- 최고품질의 보육 확보
- 건강보험의 보장율 75% 달성
- 공공의료시설 확대
- 공공의학 전문인력 양성
- 장애연금제 도입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평균수명 80시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 3모작을”

□ 현안 진단

“2020년대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노동력을 부가가치 생산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생의 3모작

- 아동·청소년기가 제1모작의 시기이고, 장년기가 제2모작의 시기라면, 노년기는 인생의 제3모작에 해당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기에 해당함.
- 2026년에 노인인구비중이 20%로,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고속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의 건강과 활력은 우리사회의 건강과 활력
-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 시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노인계층의 건강과 일, 여가 등을 보장하는 체계 필요
-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8.6세지만, 건강수명이 68.6세로, 10년을 건강하지 못한 노년기로 지내다 사망하는 형편임.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의 근로 및 요양체계 충실화 필요

- 현재의 노인세대는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행한 사회적 기여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 매우 적으므로 이를 시정해야함.
- 2020년대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이상)를 대비해 노인의 노동력이 부가가치 생산 및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으로서 새롭게 조명되어야함.
- ‘평균수명 80세 시대’에 ‘건강수명도 80세’에 이르도록 근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노인 요양체계를 내실화해야함.

□ 비전과 전략

● ‘소득-일자리-건강-학습’의 보장 전략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일자리, 건강, 학습 등이 필수적인 부문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3기 인생을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해야함

● 노인집단유형별 세부 안전망 구축 전략

- 440만 명의 노인을 건강상태와 소득상태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6개의 집단으로 구분됨. 따라서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

구 분		건강(기능) 상태		
		건강 (17.1%, 74.9만 명)	만성질환 (49.2%, 215.5만명)	기능장애 (33.7%, 147.6만명)
소 득	상 (14.6%, 63.9만명)	유형 I 3.0%, 13.1만명	유형 II 8.0%, 35.0만명	유형 III 3.6%, 15.8만명
	하 (85.4%, 374.1만명)	유형 IV 14.1%, 61.8만명	유형 V 41.2%, 180.5만명	유형 VI 30.1%, 131.8만명

노인 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계속근로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기초소득 보장 ▶ 노인 일자리 창출 : 30만개 ▶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연장 ▶ 자원봉사 저축제 도입
노인 건강 및 영양, 주거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 : 생활체육, 영양 및 외상예방, 만성질환 사례관리 ▶ 지역사회 노인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 자립친화형 주택구조 개선 : 화장실, 문턱 등
노인인력개발을 위한 학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체계의 구축 ▶ 지역노동수요를 반영한 노인 일자리 및 자원봉사 교육·훈련 ▶ 변화하는 사회적응 교육 : 정보화 교육 등 ▶ 풍요로운 노년생활 위한 건강, 여가, 문화교육
정보화기술을 통한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보건·요양서비스 혁신 :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재가 치매환자 보호·관리 ▶ 교육 및 정보제공 혁신 ▶ 동년배 및 세대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노인 전문방송국 개설 : 교육, 여가, 정보제공

- **세대 공감**이 이루어지는 사회 구현
 -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세대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함
- **예측가능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음
 -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의 설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음
-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현
 - 노인들에 대한 사적인 부양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음
-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후생활이 되어야 함
 - 경제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노인 스스로 활기찬 노후를 맞게 해야 함

□ **주요 정책**

- **기초노령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각출 1인1연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적연금 제도의 1층체계로 역할하게 함. 최상위 일부노인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 폐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 국제수준의 기술력 확보, 제품 상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시장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조성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수혜범위, 급여, 인프라 등에서 매우 졸속으로 준비되고 시행되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도로 출범

● **지역사회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사례관리나, 여가프로그램, 건강예방사업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 **농촌지역의 폐가를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

- 전국에 산재한 폐농가구를 노인용 전원주택으로 재분양하여 농촌 살리기와 노년 전원생활 활성화의 기반으로 함

● **도시 임차 고령자를 위한 다가구 매입 방식을 이용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문제 해결

● **노인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여능력 향상**

-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노인의 학습권 보장

● **노인 정보불평등 해소**

- 정보화교육 강화, 노인용 콘텐츠제공 사이트 활성화, 저소득 노인 휴대폰요금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노인세대의 정보 격차 해소

보건의료 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요 정책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 추정치 61.8%)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금연치료, 비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검토
-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 경감
-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검토
-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구조 효율화 추진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여, 총 20%로 상향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

●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및 신설에 임기 중 총 8조원 투자

- 신축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 산재병동, 응급시설 등 공공의료 목적의 시설 확대에 치중
- 기존의 중앙 및 지역 공공병원들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 시설신축 및 기존시설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유럽의 공공의료시설을 참조하여 우리현실에 맞는 모델 구축
- 1차 연도에 지역별 의료수요조사와 함께, 신축시설의 입지 및 규모, 특성에 관한 중장기적 청사진 확정
- 2차 연도부터 매년 평균 2조 규모의 재정 투입

●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추진하되,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1기 배출 목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주치의) 의학 등 공공성이 강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① 공공의학 전문대학원들을 신설, 또는 ② 국공립의대에 정원외로 지역거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케 하여, 학부졸업자에게 우선 개방하도록 함. 단,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교과과목에 포함.
- 이들은 졸업 후, 일차적으로 (신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거나, 산업현장을 위시한 다양한 현장에서 파견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함.
- 그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적어도 민간부문의 평균치에 뒤쳐지지 않도록 현실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 설치하여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에 참여하게 함.**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 확대
 -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전환
 - 주치의가 중심이 되어, 의료정보(공유)체계 구축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방 활동에 집중하게 함
-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 체계 개선
 - 소규모 의원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운영 수익 제고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 **응급 구호체계 개선**
 - 전국의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실, 구급차장비 개선
 - 응급구조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 경질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 기회 확대
 - 외상센터(Trauma center) 설치 확대
-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안정적 인력확충 방안 모색**
 - 외과의, 응급구조사 등의 의료인력 우선 확충
- **대학병원의 연구능력과 중증환자 치료능력 강화**
 - 기초의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연구여건 개선
 - 법의학, 범죄심리학 연구 등의 활성화로, 범죄수사의 과학적 전문성을 의학적으로 보장
 - 희귀난치병, 중증환자를 주로 진료하도록 유도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의학연구 등에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
- **남북 보건의료 협력기구 설치**
 -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사업 추진
 - 통일에 대비한 의료체계 비교 연구 실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강화

“노·사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 정책 목표

“‘산업재해보험 가입 근로자 10만명당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5년 현재의 13.1명에서 OECD 30개국 평균치인 4.6명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

● 정부와 기업주 중심의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산재 피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체제로 개편

- 이는 다수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노동부 지방근로감독관들이 지지하는 새로운 운용방식으로, ① “산업별 및 지역별 노·사대표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② ‘산업 및 지역별로 고유한 재해’의 예방과 보상, 치료, 사후조치 및 새로운 급여항목 결정 등의 주요 의제를 자율적으로 협의, 의결하게 하고, ③ 정부는 (큰 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 집행을 관리하되) 산별 지역별 노·사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가급적 존중하여 법제화하는 조합주의 (corporatism) 방식을 도입·정착시킴.

● 임기 중에 산업재해보험을 국민건강보험에 통합하고, 그 통합비용으로 매년 1.6조 원씩 총 8조원 재정 투여

- 2007년 9월 현재 징수결정액 대비 산재보험대상근로자수는 1,241만명으로, 이는 법적으로 산재보험가입대상자인 임금근로자 1,590만명에서 350만이 비는 수치이며, 여기에 (非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와 자영자를 제외한 무급가족 종사자 145만명까지 합하면, 약 500만명이 최소한의 산재보험 미가입자로 추산됨. 이들의 대부분은 산재취약계층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1.6조원(2007년 9월 현재 산재보험 대상자 1인당 평균 징수결정액 33만원을 기준으로)으로 추산됨.

- 임기 5년간 총 8조원을 국고 지원할 경우, 현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예외 없이,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여타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해, 공보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이후 추가재원이 투여되어,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게 될 휴업비의 수준이 현행 산재보험에 필적하게 될 경우, 비야흐로 모든 국민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

● **산업현장에 주치의제도 도입**

- 2007년 현재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 미납금(약성부분 제외)을 철저히 추징하여, 공공 의료전문대학원의 산업의학 전공자에 대한 무상교육(선발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정책 부분 참조)을 위한 기초비용으로 전환
- 이들 산업의학 전공의들은 졸업 후 일차적으로 산재취약업종의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일군의 근로자들의 주치의로 배치될 것이며, 인두제에 입각한 급여체계 하에서, 산재예방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임. 아울러, 일부 여타 인력은 공공의료시설의 산재병동(보건의료정책 참조)에 치료 및 연구 전문 인력으로 배치 될 것임.

● **산재 취약 지점들에 대한 ‘맞춤형 조치’ 시행**

- 기계금속 및 화학업종의 사내외하청업체와 건설업종의 외주업체(용역 및 파견업체) 등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재에 특히 취약함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함.
- ‘개정된 비정규직 법안’의 재개정을 통해, ① (개정법안 적용의 사각지대인) 사내하청업체와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하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업체 업주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②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그 적용대상에 사내하청업체와 외주업체들을 포함시켜 비정규직의 비중을 감소시킴.
- 3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원청사가 51% 이상 직접시공케 하여,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하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고용관행 지양.
- 제조업종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나누기(교대근무제 변화)를 통해,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수준으로 줄이도록 유도

●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한 생계 지원책 마련**

- ①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른 비축 자금, ② 2001년에 노동부가 약속했던 생활보조비(월 73만원)를 위한 비축재원, 및 ③ 산재보험 미납금 추징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함.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정책의 혁신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안정”

□ 주요 정책

-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 연금개혁의 전 과정에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제도운영을 도모.
-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한 1인1연금제인 기초연금제로 전환**
 - 1층 연금체제로, 국민 모두에게 평균 근로임금의 10%를 지급하여, 기초생활 보장(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현재 평균소득의 40%로 낮춰진 연금액을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도록 재조정**
 - 2층 연금 체계인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분배효과를 줄이는 대신, 납부한 보험료수준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소득비례형 체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평균소득자의 경우 급여율이 50%가 되도록 함. 결국,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60%이상의 총급여율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추진.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방안)
- **국민연금이 조정된 만큼 특수직역연금도 조정**
 - 국민연금제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특수직역 연금도 그에 맞추어 조정하고, 다만 특수직역종사자는 여타의 다른 복리제도를 강화하여 보전함
 - 국민의 직업이동성이 확대되고 공직의 민간개방 확대추세에 맞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

아동 정책의 강화 “아동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는 나라”

□ 주요 정책

- **아동수당제 도입 및 점진적 확대**
 - 0~3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 **2012년 이전까지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강화**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 수준까지 확충. 이를 위해 연평균 5천억원씩 총 2.5조원의 예산 배정
 -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단기 보육시설 확충
-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여 아동의 복지와 교육, 보건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역사회에 문화복지인프라 구축
 - 아동에 대한 ‘보건-교육-복지(HEW)’ 연계정책 실시
- **빈곤 아동을 제로(Zero) 정책 (cf: 2004년 현재 9.8%)**
 -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 (결식아동 제로화)
 -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 교육
 - 결혼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책임의 보육 정책 강화 “영·유아의 보육은 국가의 책임”

□ 주요 정책

● 3~5세의 무상교육 실현과 0~5세 취업모에게 보육지원

- 모든 3, 4, 5세에게 무상 교육
- 취업 등의 이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지원

●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보육의 공고한 기반 구축

-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 공간으로 최대한 할애

●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

- 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의 현실화와 ② 수월성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실시비용을 감안한 보육료 책정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해, 年 2조 5천억원씩 임기 중 총 7.5조원의 예산배정
- 공공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인증제도로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 보육특별회계 마련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조세감면범위의 축소를 통해 조달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자원관리

신 빈곤 정책 추진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실현”

□ 주요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 급여제’ 도입
-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 전개
 - ‘일자리-직업훈련-복지’가 연동되는 맞춤형 탈빈곤 프로그램 구현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집중적인 직업훈련 실시
 - 고용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시군구청의 연계 강화
 -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 강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배려하는 사회”

□ 주요 정책

● 기초장애 연금법의 조속한 재정

- 현재 장애인의 71%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110만명이 현재소득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있음
-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성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조세, 국민연금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

●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기준고용율을 3~4%로 확대하고 위반시 시정절차 적용

- 2006년 12월 현재 장애인구의 0.4%가 보호고용되어 있고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보호고용의 기회가 심히 제한되고 있음
- 장애인을 미고용한 의무고용대상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징수 철저히 이행

● 직업재활시설 수를 단기적으로 등록장애인의 1%, 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확대

- 2006년 12월 현재 303개의 직업재활시설로는 보호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정

●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 담보 조치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의 이행을 강제화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상설하고, 장애인관련 전문가 비중을 30%로 구성함

●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통합교육 강화

- 장애아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던 기존의 학교들이 통합교육으로 선화할 경우, 이에 따른 시설 교체 및 교육 인력 보강 등의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지역사회 보건소,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정기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국공립병원 및 재활병원 건립 시, 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의 배치, 전문치료실을 마련함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도우미사업 활성화,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복지부문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번호	추진내용	시기					5년간 총 소요예산 (조원)
		'08	'09	'10	'11	'12	
1	부분급여제 도입						4.0
2	노인, 여성, 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12.5
3	기초연금제 등 연금개혁						8.0
4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위한 시설, 인력 확충 등						8.0
5	출산지원금, 산전후휴가급여						9.0
6	아동수당제 실시						9.0
7	빈곤아동을 제로 (Zero)화						1.0
8	공보육시설 확충 (아파트 1층 등)						2.5
9	우수한 보육의 질 담보						7.5
1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既확보 법정기여분 20조 외)						10.0
11	공공의료 시설 확충						8.0
12	국민주치의제 실시에 따른 1차의료기관 시설 및 지원						2.0
13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시설, 교육비, 급여 등						2.5
14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통합비용						8.0
15	장애연금제 도입						6.0
16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1.0
17	사회복지사 근로조건 개선						1.3
	총 계						100.3

통일 · 외교 ·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통일 지향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비전과 목표

- 한반도 비핵화의 달성
 - 임기 내에 북한 핵 폐기를 달성하여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조건 확보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분쟁 가능성의 종식을 통해 협력적 남북관계와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의 구축
- 남북 경제협력의 심화
 -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주요 정책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의 전환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深川), 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공동의 협력사업 추진**
 -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고, 수자원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사업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을 둠

동북아 경제 · 안보 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비전과 목표

- 6자 회담의 틀을 발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조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 주요 정책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 · 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 · 군사 · 정보 분야 협력을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 · 중 · 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함.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동해권 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지역과의 다자 협력 추진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조성

- APEC회의(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연해주 접경지) 개발
- 환동해 PNG(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 사할린~나호드카~속초 PNG라인 구축
- 남북한 전력망 및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환동해 물류망 연결 : 핫산~나진~속초~부산까지 철도도로망 연결
- 동해안 에너지 · 관광 클러스터 구축하여 남북한 연계 관광, 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 3통(통행 · 통신 · 통관) 문제해결 및 북한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지원
- 남북 통합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 비전과 목표

-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병행 발전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
-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

□ 주요 정책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
-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先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전개
 - 외교가 국내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외교를 추진
-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투자와 운용의 선진화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비전과 목표

- 자체 역량이 결여된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예군을 육성
-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군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재사회화를 적극 지원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주요 정책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 · 해 · 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 · 지휘통제 · 정밀타격 전력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 · 전자전 · 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육군은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능력을 확보하면서 정예화
- 해군은 첨단화 · 정보화를 계속하면서 관련 기술을 비축하고 무형전력 강화
- 공군은 하이-로우(high-low) 믹스를 통해 북한의 수적 우세에 대응하는 한편 전략적 운용에 적합한 체제 구비
- 동원전력은 예비군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되 축소된 예비군 전력은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민방위로 이전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 있는 국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형 개혁 추진
- 출신 · 3군 · 병과별 · 지역 균형발전 추진
- 전문화 · 계열화 등 방산제도 혁신 및 방산 경쟁력 강화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지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 · 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산 · 군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교육훈련인증제 도입
- 현역 군인의 교육훈련을 위한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고 제대 후 취업하여 보험료를 내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 일선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학습결과를 인사에 반영(군인사제도 개선) 및 학습휴가제 도입(기존 휴가 제도 개념을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휴가 개념으로 전환)
- 군 학습은행제를 도입하여 군복무 중 수강한 교육훈련에 대해 취업 시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 품질 인증시스템 및 질 향상
- 장병들의 실용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역 장병들의 취업, 학업문제 등 재사회화를 적극 지원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미래전략 개발 분야에 투자
- 발전된 IT 등 각종 첨단 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용하여 군사적 발전과 민간 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

군 복무기간 단축 “임기내 사병 복무기간 1년 반 이하로 단축하겠습니다”

□ 비전과 목표

- 2012년까지 모든 사병의 복무기간을 1년 반이하로 단축하여, 병역의 형평성과 군복무 동기 강화
- 군 의무복무 이행자에 대한 평생 세금감면 혜택부여로 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을 합법화

□ 주요 정책

- **현재 2014년까지 육군사병기준 1년 반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되어있는 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
 - 병역가용자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2011년 이전에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함으로써 병역의무 형평성 보장
 - 대신 4만 명에 달하는 유급지원병을 조기에 증원하여,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감소 예방
- **군 복무자에게 평생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고소득 · 고학력자의 현역 군복무 지원을 적극 장려**
 -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감세혜택 제공을 통해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유도
 - 여성 출산시 소득세 일부 경감으로 형평성 보장

여성*

 “여성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평등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0% 달성”

□ 비전과 목표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인 60%로 증가
-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 완화
-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양극화 및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

□ 주요 정책

-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차별 철폐**
 - 여성들의 취업률 제고와 취업연속성 강화 추진
 - 저소득 돌봄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 및 임금보전제(EITC) 적용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생활수준 임금 보장
-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확대
 -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확대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대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의 사회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돌봄 사회”

□ 비전과 목표

-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사회 조성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돌봄 노동은 사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

□ 주요 정책

- **돌봄 노동의 부담 완화**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 유아 교육 3년(3~5세)의 완전무상교육 추진
 - 가족 간호휴가제 도입
- **돌봄 노동에 효과적인 환경 조성**
 - 보육 및 양육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재구성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 및 확대
- **돌봄 노동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
 - 저소득 돌봄 근로자의 임금보전제도 실시

여성할당제 강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

□ 비전 및 목표

- 우리 사회의 높은 여성 교육수준에 걸맞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점차 확대
-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채용 시뿐 아니라 채용 후까지 지속 추진

□ 주요 정책

1) 행정직

- 장·차관,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위원,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임명시 30% 여성 할당 추진
- 여성 관리직 20% 임용 목표제 및 승진 할당제 실시

2) 국회의원

- 지역구 선출직 공천에서 여성할당 30% 의무화
- 선출직과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
- 남녀 교호 순번제 확립

3) 공기업

- 공기업 임원 추천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
- 비상임 이사의 30% 여성 할당 추진

4) 교육분야

- 초중고교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방직 임용 및 승진시 여성 할당제 실시
- 국립대 여교수 채용을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여성 교수 채용 목표제 활성화 방안 강구

여성들간 차이를 반영한 정책 수립 “여성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 비전 및 목표

- 여성들간의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적극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경제사회 내 통합을 지원
- 이종 차별을 겪는 여성들의 인권 보호

□ 주요 정책

-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 확대**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 직업훈련과정 중 생계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와 정착을 위한 지원**
 - 결혼비자발급 전 인터뷰 제도 및 초청자 심사제도 도입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국적취득제도 개선
- **여성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과 인권 보호**
 -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 공공분야에서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 추진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설치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여성의 안전권과 건강권 보장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 비전 및 목표

-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정책 체계 구축

□ 주요 정책

- **성폭력, 가정 폭력 관련법과 제도의 강화**
 -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강화, 형량 기준 마련
 - 실형을 산성범죄자들도 교정 교육 실시
 - 가정폭력 가해자 사건처리기준 마련
 -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성인지적 관점의 건강정책 수립**
 - 분산된 각 부처의 건강정책 조정, 실행, 평가시행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정책 체계 구축
- **여성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 여성 집중 사업장의 남성 중심적인 작업 시설 개선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재보상보험의 현실적 적용
 - 산재은폐, 건강보험 처리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

문화*

 “창조적 지식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다문화사회의 아시아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
마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사업 전면 추진 “문화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확충하겠습니다”

□ 비전과 목표

- 한글과 한국어의 가능성을 한민족의 가능성으로, 나아가 인류의 가능성으로 발전시킴
- 한글은 21세기 디지털문명에 가장 어울리는 문자로, IT강국인 한국 문자를 전 세계 컴퓨터 용어로 정착
- 한국어를 세계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계 언어로 발전시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주요 정책

- 국립국어연구원에 설화조사연구팀 등을 구성해 국어연구를 강화, 확대 지원
- 한글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국제적 관점에서 개발 및 제작
- 한글디자인의 세계화 사업 적극 지원

전통사상과 학문에 바탕한 인본주의 기풍 진작 “사람중심, 사람중시의 문화를 이어 가겠습니다”

□ 비전과 목표

- 고조선 단군시대의 홍익인간 이념으로부터 근대 조선의 실학 및 동학사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사상과 학문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 속으로 보급
-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리더십이 인본주의 사회개혁과 문예부흥으로 발현되었듯, 오늘날 대통령의 리더십이 21세기 창조적인 문화가치로 발현되도록 추진
- 실사구시·경세치용·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오늘날 실용·민생·개혁의 밑거름으로 삼고,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정신의 동학사상을 이시대 ‘사람중심’의 인본주의적 가치로 확산

□ 주요 정책

- 한국 전통사상 및 학문과 동서양 인본주의 연구를 위한 지원 강화
- 한국 전통사상과 학문 발상지들의 역사문화 관광유적지화 추진
- 홍익인간에서 동학까지, 세종대왕에서 정조대왕까지 나타난 인본주의 사상을 방송, 공연, 축제, 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 보급하도록 적극 지원
- 공교육 및 사회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에서부터 인내천까지의 전통 사상과 문화 콘텐츠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의 정례화

하
마

지역별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 “자생적 힘을 정책적 비전으로 발전”

□ 비전과 목표

- 자생적 문화예술클러스터의 가능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예술인과 문화공간, 대학 및 연구소, 관련 기업이 연계된 ‘문화예술 창조밸리’ 를 조성함으로써, 기초 문화 인프라, 문화산업과 문화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꾀함
- 이를 통한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여 사계절 주민 참여 문화교육체험 명소를 조성함으로써, 문화선진국으로서 신문명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대규모 문화일자리 창출

□ 주요 정책

● 문화 창조의 근간인 기초문화연구소를 광역별로 설립

: 지역 특성에 맞춰 미술, 음악, 영화, 만화, 전통, 환경 등 특성화

- 기존 문화공간이나 폐쇄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공간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관람과 체험공간을 제공

●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을 통한 문화 클러스터 구축

- 기존 도시를 문화특성화 도시로 재창조
- 문화예술분야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공모를 통한 창조밸리 조성

아시아 여성·청소년문화센터 설립 “아시아의 여성, 청소년들과 문화를 공유”

□ 비전 및 목표

- 한반도의 미래는 공간적으로는 한국~아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루트에서 찾아져야 하며, 내용적으로는 정치·경제·외교·국방·환경과 에너지 등 정책통합콘텐츠의 중심에 ‘문화’를 설정
- 문화와 풍속의 모태인 아시아 여성문화를 공유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동시에 아시아 청소년리더십을 수립·교양하는 기구를 구축하여, 여기서 배출되는 청소년들을 문화메신저로 양성
- 이를 통해 IT와 한류(韓流)문화의 아시아 공유재화를 위한 기초 형성

□ 주요 정책

- 신 한류(韓流) 루트로서 아시안 하이웨이, 범아시아철도망(TAR)과 남아시아해양루트 등이 연결된 아시안 벨트 주요 지점에 아시아 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네트워크 구축
- IT와 ‘한류문화 메신저’로 매년 1만 명씩 향후 10년 간 10만 명의 ‘청소년문화자원봉사단’을 양성하여 아시아 각국에 파견 교류
- 아시아 각국에 ‘다문화 아시아도서관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아시아 역사·문화 도서관’ 사업 지원

하
마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 환경 조성 “문화예술을 통해 남북간 공동체 발전에 기여”

□ 비전과 목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일본·러시아·중국과 함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는 시발로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세계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승화하여 DMZ 상징구역에서 평화상생 국제문화예술행사를 개최

□ 주요 정책

-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책임 당국자 간 채널 구축과 상설거점 마련, 공동사업 기획, 이를 위한 예산 및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 남북의 문화재 공동 발굴 및 보존사업 추진
- 임진각 평화누리~판문점(DMZ)~개성을 잇는 평화벨트를 형성하고 대규모 국제 행사 추진
- 남북 문화콘텐츠 국제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 남북 문화예술 및 문화재 정보화 사업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스포츠 분야의 북한에 완전 개방 - 선수 육성 및 경기장 건설 지원
- 남북통일문화상 제정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추진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리겠습니다”

□ 비전과 목표

- 21세기 문화세계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민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체계를 구성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민간 합의형 구조 개편 -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강화
-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과 재원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정책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
- 지역의 문화복지를 위한 재원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지역축제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에 대한 명문화 및 조례제정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 강사 파견과 육성
- 지역의 문화예술 복합 공간 건립 및 기존문화시설의 책임 경영제 도입
- 지역문화재단 설립 : 지역 문화예술 공간 위탁운영,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 지역민과 밀착된 ‘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하
마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의 체계적 추진 “디지털 시대의 문화강국 구현”

□ 비전과 목표

- 범국가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자료정보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함으로써 IT강국의 위상을 강화
- 민족문화의 원형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는 문화저장고를 통해 정보화시대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축적
- 문서, 영화, 공연 등 각 분야별로 독특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수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급

□ 주요 정책

- 공원, 박물관, 도서관처럼 디지털 시대의 공유물을 만들어 온 국민이 정보와 지식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문화사회적 콘텐츠 마련
- 모든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아카이브로 전환하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생산·관리 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지자체 단위의 공공 도서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하나의 도서관마다 하나의 주제로 특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펼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공공 디지털 로서 양질의 풍부한 아카이브를 확장
- 민간차원의 정보와 지식을 양적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상상력이 넘치는 지적 생산물을 상호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디지털 공유운동의 활성화

다문화 한국사회(Multi-cultural Korea)의 구축 “사람의 다양성과 다양성의 존중, 글로벌 일류사회의 출발입니다”

□ 현안 진단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대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인종, 국적이 다양한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동력의 국제이주 추세

- WTO, FTA 등 전문 인력의 국제이동 자유화를 요구
-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전 세계의 이주자가 1970년 8,200만 명, 2000년 1억 7,500만 명, 2005년 1억 8,500만~1억 9,200만 명으로 추산

●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현실적 필요

-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함
-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살기 위한 적응이 필요함

□ 비전과 전략

“노동력의 국제이동, 결혼이주여성과 귀화인의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의 인구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한국의 국제경쟁력의 발현

- 경제 규모 12위권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이주정책을 구현함.

※ 참고: 2007년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인종 차별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다인종적, 다문화적 가치를 위한 교육 권고

● 다양성과 창의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핵심 사람기술임

- 외국인과의 일상을 나누며 배우는 다양성과 다문화감수성은 굳이 외국까지 안가더라도, 아니 외국에서 살다와도 습득하지 못할 귀중한 사람기술로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줌.

□ 주요 정책

● 추진체계 확립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다문화청> 신설
 -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국인의 인권보호,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외국 인력관리, 외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국내 외국인 집단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여 내외국인간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수행
- 각 부처에 <다문화정책조정관> 직 신설
 - 다양한 외국인 집단의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외교통상부, 경제 부처(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이민·다문화청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도모함
-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화전담 인력 배치

●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문화이해 증진

- 다문화사회 교사양성
 - 유초중등 학교와 직장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양성
- 공무원과 교사연수
 -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등에 다문화 관련 과정 설치

● 공통정책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 해외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 민과 동일한 의무(예,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이중 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 영주권과 국적취득에 한국어와 기초생활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함.
- 체류 자격별 권리와 의무를 명기하고 일관되게 집행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와 준수에 있어 국제적 위상제고

●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

- 국제결혼자녀에 대해 취학 전 2년 무상교육과 기본 한국어 교육 공약을 국민으로서 당연 적용함.
- 한국어와 기초생활교육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족성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인 인적 자원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다양한 훈련기회 제공
-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농촌 및 농업관련 분야와 공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별도의 정책 수립 및 구현

-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 가족에 대해 이들 여성의 출신국 문화 및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각종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사업의 우선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제공
- 결혼중개업체의 등록제를 실시하여 인신매매성 결혼이 국가적 경쟁력과 품위의 문제임을 교육시키고, 위반시 처벌 규정 마련
- 국제결혼가정 집거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문화, 사회교류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과학기술*



“창조적인 이공계 인재양성, 과학기술 육성
정책과 응용 능력의 배양으로 창조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육성과 이공계 기피 해소 “우수인재가 과학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비전과 목표

-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기술입국 실현
- 정부부문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과학기술계 당면현안부터 해결하여 이공계 기피문제를근원적으로 해결
- 이공계 국가연구원 제도 도입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주요 정책

● 21세기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연구개발능력 지속 확충

- 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4%로 확대해(3.2%, '06년) 세계 2위로 도약
 - ▶ 현재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4.6%), 스웨덴(3.9%), 핀란드(3.4%), 일본(3.3%)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연구개발비는 7위 수준
- 정부의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
-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
- 국가 전략기술개발과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
- 연구개발비를 보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첨단기술에 기반한 '10대 전략산업(잠정)' 육성

- IT융합,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항공우주, 플라즈마, 디자인·설계, 금융·서비스,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국방·정보 등을 선정
 - ▶ 일본의 기술장벽과 중국의 추격을 돌파할 방법은 미·독·일 등이 독점해온 전략산업분야를 과학기술인재를 통해 개척하는 것임

●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이공계 대학 육성

- 지역별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이공계대학을 집중 육성
 - ▶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특허경쟁력과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이 가능한 대학으로 발전

● **발명특허의 질적·양적 수준을 고도화**

- 이공계 기피해소와 연구개발인력 기업유치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관련 하한선을 설정
- 직무발명 실시권에 대해 발명자가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KAIST의 경우 50%)를 부여
- 국민적 발명특허 활성화와 특허·기술시장 확대

● **이공계 기피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

- ‘이공계 국무총리 배출’ 과 ‘이공계 사회지도자 진출 확대’ 를 추진

● **‘이공계 보안법’으로 알려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관련 대책 마련**

- ‘사전모의 처벌’ 등 형평성에 문제 있는 조항 개정
- 전직제한과 관련한 개인과 기업간 불평등 근로계약 금지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하고 연구분위기 조성**

- 비정규직이 집중된 IT, BT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원(T/O)을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화
- 과제기반 연구관리시스템(Project Based System)에 있어서 연구기본인건비를 제공하여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
- 연구 프로젝트 단위(팀, 센터 등)로 이동하고 통폐합하는 것 허용
- 연구전문가(specialist)와 연구관리자(manager)로 이원화된 인사관리체계(2-ladder system) 도입 장려

● **과학기술인 창업 지원과 벤처 캐피탈 시스템 선진화**

- 연구원·교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 담보중심의 벤처 캐피탈을 기술평가 중심으로 선진화
- 웰컴사와 같은 지적재산권 위주의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 **이공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국가연구원제 도입**

-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가칭 “국가연구원”으로 선발
- 가칭 “국가연구원”은 출연기관의 정식 직원의 자격으로 대학, 기업 등 연구 현장에 파견하여 과학 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
- 국가연구원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의 제고하며, 대학의 이공계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

BT, IT 등 첨단융합 기술강국 추진 “BT, IT 기술능력을 확충하여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

□ 비전과 목표

- 2006년 수출규모가 세계 1·2위인 독일·미국의 1/3, 일본의 1/2이며 이 중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1/3인 ‘디지털강국’에 걸맞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
- 바이오(BT), 나노(NT), 문화(CO)와 정보통신(IT)이 융합되는 추세에 맞춰 기술융합적 정책 추진
- BT+IT, CT+IT뿐 아니라 건설·토목, 조선·항공 등의 IT기술과의 융합 도모
- 이종 기술융합, 유비쿼터스 기술 확산 등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IT 잠재력을 지속 확보
- IT의 유비쿼터스화(u-IT)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화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응
-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과 소수자가 주도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 주요 정책

- **양적 인프라성장과 자본설비 중심의 IT 정책에서, 응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인력 및 아이디어 중심의 IT 정책으로 전환**
- 첨단산업 경쟁력은 제조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에 의한 제품 창조능력에 있으므로, 아이디어 기반의 소규모 기업창업 여건 조성
- **IT에 국한된 산업성장 전략과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타 기술과의 융합, 수요자의 선호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1, 2, 3차 산업에 IT를 접목하여 기존 제품의 감성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
- **방송·통신기술 등 이기종 기술 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그룹의 갈등을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조속히 해결**
- 산업측면과 언론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IPTV 등 관련 서비스의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조기 정비
- 방송·통신 기술 융합서비스와 관련 제품생산을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u-IT 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투명성과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 발전**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

□ 비전과 목표

- 사람중심적, 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사회 통합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함께 도모
- 중소기업의 혁신능력과 지역혁신정책을 고도함으로써 복지형 국가혁신 및 균형발전을 이룩
-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주요 정책

- GDP 대비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질적 고도화 추진, 과학기술자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확대, 창의적 기초연구 강화를 통한 창조한국 건설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보건의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 등 사람중심적, 환경친화적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사회발전과 삶의 품격을 향상
- 현장기술인력 교육의 체계화 및 기술전수 체계의 획기적 개선, 수요지향적 산업기술 인력 양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업종별, 기술수준별 협력 체계 강화.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글로벌 연구협력 체계 구축
- 지방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 추진
 -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의 기획·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연구개발전담 조직과 기획·관리기구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코칭형 지원사업의 형태로 운영
- 과학기술인들이 학습하고 축적한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자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력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생지원시스템 마련
-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사업 추진
 - 과학기술문화사업을 교육 복지 및 평생학습체계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
 - 지방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획기적 확충, 노인 및 장애우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 추진
 - 대도시에는 과학관을 확대 설치하고 중소도시에 복합과학문화 공간을 확보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육성체계 구축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비전과 목표

- 지식창조시대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과학기술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대접 받으면서 제몫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들이 어렵게 익힌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주요 정책

- **문과·이과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기술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추진**
 -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분리되는 자연계/인문계를 통합운영
 - ▶ ‘과학인재는 영재교육체계(영재학교, 과학고 등)를 통해 별도 육성
 -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후, 과학기술교육의 새로운 혁신을 이룩
-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체계화 하여 축적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사업’을 신설·운영**
 - 기존 소규모로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력개발 지원사업을 종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수준별,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력개발 통로 제공
 - 프로세스 엔지니어 제도, 코칭형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자들의 다양한 경력개발 경로를 개발
-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를 위한 다양한 통로개발**
 -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자 주니어 보드 제도’를 운영
 - 과학기술자들 중심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토론했던 ‘과학기술 정책개발 포럼’을 반기별로 개최

50만 IT 청년인력 해외 진출 지원 “IT 강국의 이점을 살려 청년인력의 경쟁력 제고”

□ 비전과 목표

- ‘미국유학 1등’인 현실을 감안, 인재를 국내에만 유지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글로벌화된 인재를 육성하여 장기 활용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
-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식으로 무장된 청년실업층 등에 대한 일자리를 해외무대에서 대량으로 창출
- 해외진출 기업근무, 세계 시장에 대한 현장 체험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주요 정책

- **IT 인력의 해외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확충**
 - 현행 병역제도 및 교육제도상 미비점 보완
 - 해외취업 정보 제공과 코트라 등을 이용한 취업지원 확대
 - 기술인력의 전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세계 시장에 대한 현장체험과 실무경험 확대를 지원**
 -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해외인턴십 체험 기회 확대
 - ‘글로벌 IT 청년취업’에 참여하는 다국적 국내기업과 국내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IT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육 역량의 강화**
 -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BK사업, 해외진출인력 지원사업 등의 조정을 통해 IT 교육 강화
 - 해외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과학기술인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확대 “건물과 장비만이 아닌 과학기술인의 경쟁력 제고”

□ 비전과 목표

- 정부는 기초·원천 및 공공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민간은 품질 및 공정개선과 같은 프로세스 혁신을 주로 담당하는 선진국형 연구개발 투자 모형을 실현
- 창의적인 기초연구를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사람중심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정책으로 창조한국을 건설
- 연구설비 및 시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초·원천기술 및 공공기술연구개발 투자 정책 실시

□ 주요 정책

- 폐 콘크리트와 고철을 양산하는 낭비성 기초과학 육성 정책을 바로 잡고,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기초과학 투자 정책을 실시
-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건물 및 시설에 집중되어 과학기술자들보다는 엉뚱하게 건설사들만 혜택을 보는 ‘질이 나쁜 기초과학 정책’을 과감하게 시정
- 창의적 근본연구, 산업적 응용을 염두에 둔 목적기초연구, 국가적 이해관계와 결합된 전략적 기초연구를 모두 망라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초과학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건비의 사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 인력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 지역내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활용성 제고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장비 도입시 지역 기업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연구장비 및 실험 테크닉이 지역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사람중심 · 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기술-사회 시스템 구축”

□ 비전과 목표

- 사람중심 · 환경친화적 기술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사회 통합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함께 구현
- 정부 연구개발투자에서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생명의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 등 사람중심 · 환경친화적 연구개발의 비중 대폭 증가
- 개발된 사람중심 · 환경친화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주요 정책

- **사람중심 · 환경친화적 연구개발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Human and Green 연구개발사업”을 시행**
- 이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전략적인 시야를 갖고 범부처사업으로 추진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시스템적 접근을 도입하여, 개별 요소기술만이 아니라 기술 시스템 전체와 사회적 기술을 고려**

과학기술인력 활용체계 구축 “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의 체계화, 평생지원 강화”

□ 비전과 목표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여 이공계 매력을 향상
- 현장기술 인력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내 기술 전수체계를 획기적 개선
- 과학기술자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주도적 역할 마련

□ 주요 정책

- **과학기술자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춘 이직,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
 - 과학기술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80%가 넘는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 **현장기술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전수 체계화**
 - 기능 인력의 수급 변화를 고려하여 고숙련 기술 인력양성 계획을 마련
 - 중소기업의 고숙련 인력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
- **현장기술 전수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과 연계하여 지역별, 분야별 교육협력 체계를 강화**

대·중소기업, 지역과 세계의 기술개발 협력 체계 강화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

□ 비전과 목표

-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적 기술개발 협력 체계를 강화
-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컨설팅 체계를 구축

□ 주요 정책

-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켜 혁신을 도모하는 연결형 혁신 (C & I : Connect and Innovate)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추진**
-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제도를 마련
- **산업체 내에서 업종별, 기술수준별 협력 체계를 강화**
- 기업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중급기술, 전통기술 등을 유형화
- 같은 수준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와 개발을 하는 지역 단위의 ‘연구개발 협력체’ 구축
- 같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혁신형 중간조직’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기술 협력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제도를 도입**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과학과 사회의 소통 촉진”

□ 비전과 목표

- 과학기술과 사회가 소통하는 참여와 공유의 과학기술문화를 도모
- 학습복지(Learnfare)와 평생교육체계를 과학기술문화 정책과 연계시켜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추진
- 창의적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과학기술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주요 정책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시민참여 기반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과학기술문화 아이템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인 여가 활용법을 개발
 -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과학문화사업을 추진
- 지방과학기술문화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과학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전국에 120개의 과학관을 설립하고, 중소도시에 다양한 복합과학문화 공간을 확보
 - 주민자치센터와 생활과학교실을 통합하여 풀뿌리 지역과학문화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

국토 · 환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